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 조속한 시행 기대

한국LPG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

정부는 지난 2월16일 LPG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 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1,012만개, '08기준) 중 50%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용기이며, 향후 4년 이내에 그 수치가 80%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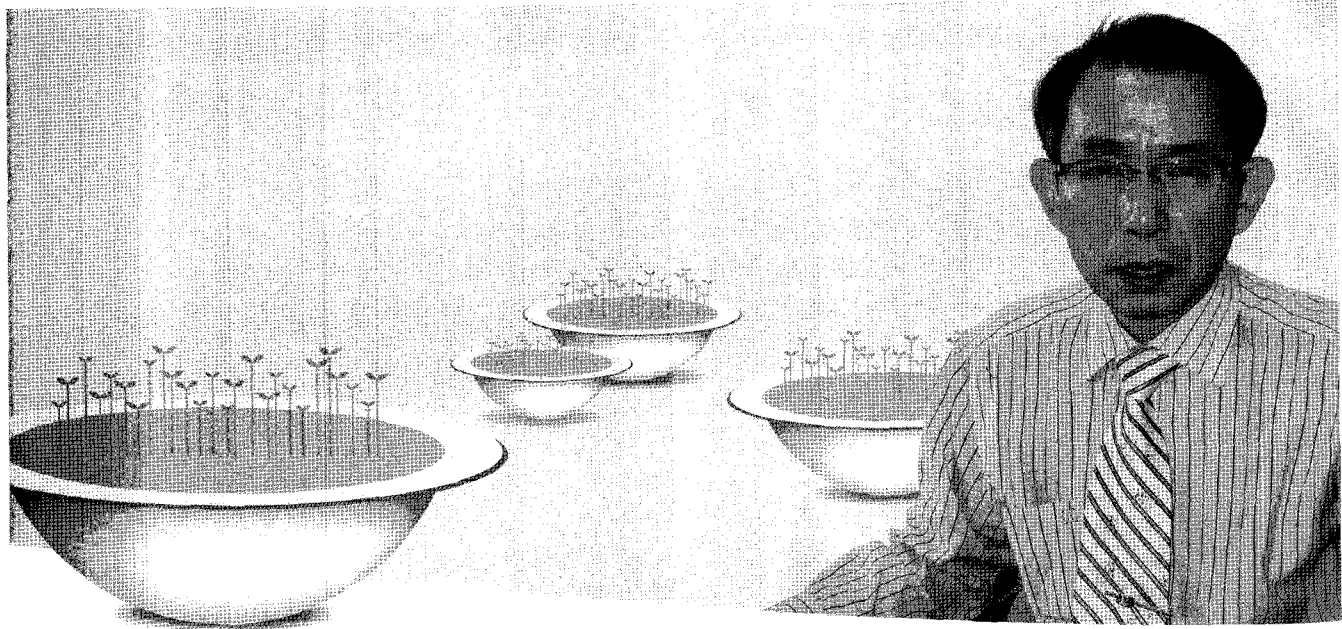
하지만 현행 재검사주기는 1973년에 제정된 것으로, 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소비자의 연료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현행의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LPG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검사주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 년수가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하고, 유통용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후용기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제’를 도입하여 경과 년수가 26년 이상 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PG용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 LPG용기에 대한 과거 사고사례, 타 용기의 재검사주기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합리적인 연장안을 토대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1995년 이후 생산된 용기의 경우 사고사례는 전무하였으며, 제도개선 이전(‘83~94)에 발생한 총65건의 사고 또한 인명피해가 없는 핀홀에 의한 단순 누출로서 현장에서 즉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 용기에 의한 사고피해는 거의 없었다.

특히 그동안 자동용접이 의무화(‘91)되고, 분체도장 의무화(‘96), 취급방법 개선(1톤 이상 용기운반 차량 리프트 설치 의무화 ‘00) 등이 세계최강의 국내 철강 제조기술(포스코) 및 용접기술(선박 제조 기술 등)과 맞물려 LPG용기의 품질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소비자 안전의식 또한 현저하게 개선되어 용기취급방법에 있어서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수준을 초월하여 일본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외국의 입법사례에서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적인 검사주기(현행 15년 미만 3년, 20년 미만 2년, 20년 이상 1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용기 제조년도와 상관없이 10년, 미국은 5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해 5년/2년의 검사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외 LPG용기 재검사 주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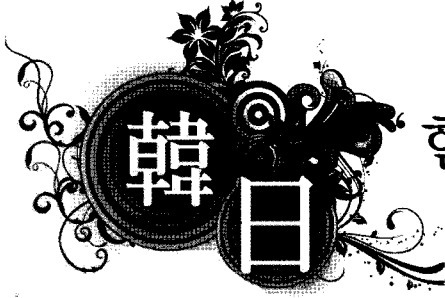
경과 연수	한국	일본	미국	유럽
15년 미만	3년(최초는 4년)	5년	5년	10년
15년~20년	2년			
20년 이상	1년	2년		

지난 1월29일 개최된 『LPG용기 재검사주기 합리적 조정 관련』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LPG용기분야 최고 전문가인 홍익대학교 김청균교수는 “그간의 연구결과 학문적이론적으로 LPG용기는 매우 안전하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이는 명확히 입증됐다”며 “LPG용기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결과 재검주기를 유럽수준으로 연장해도 안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 대다수가 국내용기의 해외 진출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해외사례 대비 현저히 보수적인 국내 재검사주기를 개선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다만 충전업체와 재검업체의 합의안(20년 미만 5년마다, 20년 이상 2년마다)으로 연장하되 20년 이상 용기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안대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한일 LPG업계 간담회 개최”

- LPG차 240만대, 한국LPG업계의 힘 대단하다 -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지난 3.5(금)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 LPG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LPG업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LPG업계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LPG자동차 및 자동차충전소 현황 등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협회는 일본LPG업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있는 후, 궁금한 사안별도 질의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일본측 참가자들은 한국의 LPG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과 LPG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한국 LPG업계의 노력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의 LPG자동차 정책 중 “택시연료 LPG의 면세”, “장애인차량 LPG보조금제도”, “경유차의 LPG엔진개조사업지원” 등에 주목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측 이타미산업 유이 마사요시단장은 “240만대라는 한국의 LPG자동차 보급대수가 너무 부럽다” 며 “LPG자동차 산업을 이토록 발전시킨 한국 LPG업계의 파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한국의 사례를 잘 본받아서 일본도 LPG자동차 대수를 점차 늘려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LPG차를 확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 LPG업계를 본받아 일본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 는 의지도 보였다.

또한, 이날 일본LPG업계 방한단은 서울에 위치한 남서울가스충전소(강남구 대치동 소재)와 서초에 너지(서초구 방배동 소재)를 견학하고, 충전소 관계자로부터 충전소현황과 판매량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한 일본의 LPG충전사업자는 일본에서는 월판매량에 달하는 양을 하루만에 판매한다

는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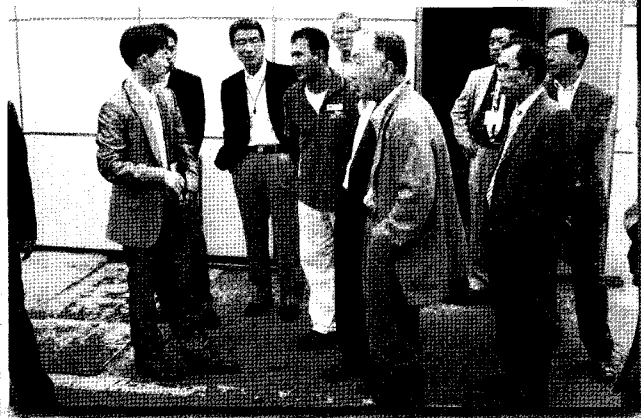
한편, 이번 한일LPG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과 충전소 견학에 대한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 각지 LPG업계로부터 한국 LPG자동차 산업에 대한 문의가 우리협회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의 LPG업계가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협회 권순영전무(왼쪽)와 일본LPG업계 대표 이타미산업 유이 마사요시 단장 (오른쪽)

충전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일본LPG업계 방문단



협회 업무추진 실적

부담사업팀

- 세금부분 카드수수료 세액공제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3.12)
- 자동차용LPG 연료품질 기준 재설정 추진
 - LPG연료품질 재설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4.13)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 개선 건의(4.13)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담당자 면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 개선 건의
- 기아자동차와 LPG차 관련 마케팅 및 업무협조 추진(4.15)
- 한일LPG업계 간담회 개최(3.2)
 - 우리협회와 일본LPG업계 LPG산업관련 간담회 내용
 - 국내LPG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현황
 - 정부지원 및 LPG업계의 노력
 - LPG자동차관련 기술개발 현황 등

공제사업팀

- 공제요율 인하(10.4.1 부)
 - 협회 공제 기본요율을 보험사 대비 5% 낮게 책정 적용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4.9% 인하, 소비자보장특약(집단공급) 39.7% 인하, 집단공급 10.9% 인하(소비자보장특약 57.8%인하), 화재보험 18.9% 인하

프로판사업팀

○용기재검주기 연장 추진

- 국회, 지정부등 관계기관과 조속 시행을 위한 업무협의

○LNG탱크로리 확대 저지 관계기관 협의(4.9)

- 수입사 등과 공동 대응방안 모색
- 향후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등에 건의문 제출 등

○DME-LPG혼합연료 보급 시범사업 추진

- DME-LPG혼합연료 충전시설 시공사업자 선정(4.2)
- 상반기 중 공사 완료 후 하반기부터 DME혼합연료 시범보급

○밸브재사용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담당자 면담, 밸브재사용 허용 건의(4.13)

직원정책팀

○2010 사업계획 Action Plan 제작 (3.31)

- 주요 추진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실현율 증대 목적
- 향후 분기별 심사분석으로 이행을 관리 및 효율화 추진

○2011 에너지특별회계 협회 지원금 심사추가(3.24)

- 판매량 보고 통합에 따른 관리 시스템 효율화 목적
- 정부 위임사업 수행을 통한 가시적 위상정립

○협회·충전사업자간 교류증대

- 개인별 분담관리 체제로 전환
- 최소 1회/주 이상 방문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으로 충전사업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노력

○가스안전관리 자금추천 조기대출 추진(5월중)

- 정부의 실질 수요예산 반영기조에 따라 향후 예산증액 도모
- 예산 초과추천을 통해 조기대출 완료 후 불용액 예산추가 지원 추구